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

세종정책브리프

Sejong Policy Brief

No. 2022-03
(2022.02.23)

"인도태평양 전략들" 비교와 함의: 미국·유럽·일본·인도·아세안을 중심으로

최 윤 정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yjchoi@sejong.org

차 례

핵심요약

Ⅰ. 서론: 왜 인도태평양 전략인가

Ⅱ.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점과 목적

Ⅲ.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의제별 비교

Ⅳ. 시사점 및 정책제언

본 정책브리프는 필자가 지난 세종연구소 정세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핵심 요약

1 왜 인도태평양 전략인가

- 인도태평양은 아시아-태평양을 제치고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전략 개념을 형성하는 국제질서의 중핵으로 부상하였음.

- 미국, 유럽, 일본, 인도, 아세안 등 주요국은 △ 중국의 패권적 확장 저지, △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정적 질서 확립, △ 미국 중심의 세력 연대 합류 등의 전략적 고려에 기반하여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있음.

- 인도태평양에 대한 주요국 전략을 종합해 보면, △ 일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시작하여 주요국별 관점과 목표를 지닌 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되면서 "전략 및 의제의 양적 확대", △ 중국에 대한 안보 우려에서 시작했지만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의제가 강조되면서 "안보에서 번영으로 의제의 질적 확대", △ 양자 보다는 소다자 협력의 형태로 "멤버십의 확대"를 통해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는 바,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양상임.

2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점과 목적

- 인도태평양에 대한 전략을 발표한 주요국의 경우를 보면, 먼저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OIP)을 기치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안하고 가장 먼저 발표한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하고 있음.
-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패권적 도전을 좌절시키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유지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 아세안은 미국 주도 지역전략에 조응하면서도 중심성 유지와 실질적 혜택이 있는 협력을 강조하고,
- 인도는 중국 견제 필요에 의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국 주도의 외교 및 통상전략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며,
- 유럽은 국별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나 중국을 배제하기 보다는 관리하

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두며, 그 방식으로 '규칙/규범'을 강조함.

3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의제별 비교

- 안보에서 출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처럼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중국과의 디커플링 시도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구체적인 번영의 의제로 확대,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디지털/반도체, 공급망, 사이버안보, 인프라/연계성 분야에서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해양안보, 기후변화, 백신, 인권 등의 전통/비전통안보 의제에서도 다양한 협력 계획이 발표되고 있음.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미국, 유럽, 인도, 아세안 등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주요 행위자들은 상기와 같은 주요 의제 추진을 위해 한국 인태전략과의 연계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음.
- 한국은 이에 대응하는 지역전략으로 신남방정책으로 조응하고 있으나 지역전략에 대한 비전과 목적상의 차이로 협력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대외전략을 수립하여 미국을 위시하여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새로이 형성되는 지역질서 수립에 동참하고 협력 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향후 한국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련된 정책과 다른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결성을 증진하고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별-의제별 매트릭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며, △협력 국가(특히 일본)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협력 기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I. 서론: 왜 인도태평양 전략인가

1. 군웅할거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

○ 최근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이하 인도태평양 또는 인태)을 둘러싸고 국제 질서 상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인도태평양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GDP 및 인구의 60% 이상, 물동량의 70% 이상을 차지함. 특히 인도양은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교역로이자 에너지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해협, 즉 바브엘만데브(Bab-el-Mandeb), 호르무즈(Hormuz), 말라카(Malacca) 해협이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임.

※ "인도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아시아를 지배할 것이고, 인도양이 21세기 세계의 운명을 가를 것" (알프레드 마한·Alfred Thayer Mahan, 1890), "인도·태평양은 세계 석유수급의 핵심 통로" (센 굽타·Sen Gupta, 1987)

○ 미국의 패권적 질서 속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온 '인도태평양'의 변화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팽창의 결과라는 것이 서방세계의 공통된 문제의식임.

-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팽창정책의 예로는 불법적인 남중국해 도서 점령, 군비 증강 및 현대화, 대만에 대한 직접적 '통일' 요구,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 역내 군사기지 건설, 분쟁지역 침입 등임.

- 원유 수입의 80% 이상을 호르무즈-인도양-말라카-남중국해를 통과하는 해양 수송로에 의존하는 중국은 2010년 경 부터 역내 배타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기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중국의 인도태평양으로의 팽창은 미국, 일본, 인도, 유럽 등 주요국의 저항과 대응 전략을 양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① 중국의 패권적 확장의 저지, ② 지정학 및 지경학적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정적 질서 확립, ③ 미국의 강력한 협력 요구에 부응하는 세 가지 전략적 고려가 공통적으로 내포

- 미국은 2017년 11월 중국 봉쇄와 동맹국 규합을 골자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했고, 일본, 인도, 호주, 프랑스 등 역내 주요 행위자들은 인도태평양이 전략적 공간으로 변모함에 따라 전략적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을 타개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조율을 실시할 틀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음.

※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지역이 될 것"이고 "미국 전략의 우선순위에 있다." (美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킬리노·John C. Aquilino, 2021)

- 본고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공간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통칭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도 인도태평양 전략의 범주 안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함.

○ 한편 인도태평양에서 전개되는 주요국 협력은 양자 보다는 삼각협력, 나아가 소다자 협력의 형태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임.

- 아베 총리가 주창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일본과 미국, 호주, 인도 4자간의 안보협력이었던 반면, 2017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회동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를 지역 국가들에 대한 외교·안보 전략으로 확장하였음.
-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3월 발표한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guidance)은 중국을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국제질서에 도전할 유일한 경쟁자'로 간주하고, 중국 세력 확장의 무대인 인도태평양에서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부상을 저지할 것을 강조하였음.
- 2018년 이후 부터는 미국, 유럽, 호주, 아세안 등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주요 행위자들간 협력 논의 시 양자 의제 외에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공조 협의도 주요 의제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음.

2.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 한국은 2017년 발표한 신남방정책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해당하는 한국의 대외정책으로 추진해왔음.

-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높여 한국의 외교, 통상의 레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한 대외정책으로서 4년여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하지만 정책의 3대 축(Pillar)인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중에서 평화, 즉 정치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가 미약한 점, 지역 질서에 대한 비전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은 정책의 대표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한국은 인도태평양을 둘러싸고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의 협력 요청에 신남방정책으로 조응해왔지만 중국에 대한 고려, 지역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시각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협력은 한계를 노정

- 특히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조율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지역협력 원칙으로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존중'이라는 원론을 반복하며 포용 원칙에 위배되는, 즉 중국을 배제하는 쿼드와는 거리를 두어왔음.[1)]

- 그런데 상기 정상회담의 대표적인 성과 문서인 한-미정상 공동성명(US-ROK Leaders' Joint Statement) 및 한-미 파트너십 설명서(Fact Sheet: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Partnership)를 통해 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여 지역의 안전, 번영 및 역동성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공약"하였음.

- 더욱이 신남방정책을 처음 발표했을 당시와는 지역 질서에 큰 변화가 있는바,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지역에 수립되고 있는 새로운 협력 구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한국의 지역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차기 정부의 신남방 또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태동하는 신질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위에 여타 지역전략과의 연대를 통해 시너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 기본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국의 접근은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팽창에 맞서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자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수정, 인도태평양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발표하고 있음.

- 동맹과 파트너십을 만들고 강화하려는 노력이 증가하면서 서로 다른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과 전략 목표, 의제와 이행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본고는 먼저 이러한 노력의 이면에 있는 역학, 서로 다른 국가 전략 인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양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참여가 비교적 용이한 안보 이외 의제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할 것임.

○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지역의 행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정보를 분석, 제시함으로써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

1) 정의용 외교장관도 2021년 2월 9일 기자회견 당시 쿼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자동적으로 타국과 그 이익을 배제하는 협력에 대한 반대이며,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지역협력체 또는 구상과 적극적인 협력"에 열려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Ⅱ.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점과 목적

○ 본고에서 소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모두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지역 전략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국가/지역별로 인도태평양을 바라보는 관점과 전략을 통해 추구하는 바에는 차이가 있음.

○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OIP)을 기치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안하고 가장 먼저 발표한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하고 있음.

- 2007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인도 의회에서 한 '두 대양의 합류(Confluence of the Two Seas)' 연설은 인도, 호주의 인도·태평양 정책 논의를 촉발시켰음.
- 2012년 복귀한 아베 총리는 2013년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통해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면서 일본의 활동반경을 아시아태평양에서 보다 넓은 개념인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고, 국제질서와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음.
- 2016년 케냐에서 열린 제6회 아프리카개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구상을 발표하고 2020년 방위성에 인도태평양 문제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전략 추진 기반을 조성
- 2022년 1월 17일 제208회 정기국회에서 하야시 외무상은 ‘대전환의 시대 일본 외교의 새 지평’을 여는 세 가지 결의(determination)를 통해 강력한 일-미 동맹과 FOIP 원칙에 의거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에 위배되는 지역국가의 행위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

※ 세 가지 결의는 △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수호, △ 일본의 평화와 안정 보장, △ 인류에 대한 공헌과 국제사회 리더십 발휘임.

○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아시아-태평양’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국제질서의 전면에 등장시켰고,[2] 이후 인도태평양을 둘러싸고 주요국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 2017년 11월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중국을 현상변경 국가(revisionist)로 규정하고 세력 확대 저지를 목표로 일련의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국방부(2019년 6월)[3]와 국무부(2019년 11월)[4]가 이를

2) 인도태평양 개념은 ‘인도’와 ‘해양 협력’이 강조된 것임. The Economic Times. 2018. ““Indo-Pacific’ Over ‘Asia-Pacific’ Reflect India’s Rise: US Official.” 11 June 2018.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defence/indo-pacific-over-asia-pacific-reflects-indias-rise-us-official/articleshow/61519684.cms?from=mdr.

3)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Networked Region..*

4) US Department of State. 2019.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19/11/Free-and-Open-Indo-Pacific-4Nov2019.pdf.

보다 구체화하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발간하여 전략의 틀을 완성

-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2월 11일 새로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을 발표, 아시아와 유럽의 전통적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패권적 도전을 좌절시키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려는 목표를 재확인[5)]
- 폼페오는 2020년 7월 체제전환(regime change)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으나, 금번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전략에서는 중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가들에게 이로운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방점을 두었음.
- 15쪽 분량의 본문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가 13번 언급되어 있을 만큼 인도태평양 전략 목표 실현에서 쿼드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을 확대할 것임을 밝힘.

❍ <아세안>은 2017년 11월 제30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정책에 해당하는 인도태평양 개념과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음.

-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국장급 외교 실무자들은 동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에 4개국 안보협의체 결성을 위한 첫 비공개 회동을 통해 쿼드 태동을 본격화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아세안 내에서는 인도태평양 개념의 등장으로 인해 미국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아세안이 강대국 세력경쟁의 장이 되면서 중심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
- 이같은 상황에서 아세안은 2019년 6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단일 입장을 정리한 AOIP를 공식문서로 채택하였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개념을 수용하거나 동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도태평양 담론을 아세안에 유리한 측면에서 외교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욱 컸음.
- 즉, 아세안은 미국이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차원의 지역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면서도 미국이 강조하는 중국 견제의 군사안보가 아니라 아세안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계성(connectivity), 해양협력 등 경제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담론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견제'라는 뚜렷한 전략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 <인도> 모디 정부는 지전략적 측면에서 중국을 파키스탄보다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하여 2014년 정부 출범 후 해양안보전략(Ensuring Secure Seas:

5) The White House. 2022.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022).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ecurity Council: Washington.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

Indian Maritime Security Strategy)을 첫 안보전략으로 발표하였음.

- 기존에 인도는 주요 안보위협이 내륙의 국경지대로부터 온다는 인식하에 외교적으로는 주변국 우선 정책(Neighborhood First Policy), 국방측면에서는 육군, 공군의 역량 강화와 국제협력에 주력해왔음.
- 하지만 중국의 패권적 부상과 함께 남중국해, 동중국해, 인도양 및 내륙 접경지역에서의 도발, 인도 상품시장의 잠식 등은 인도에게 통상-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함.
- 이에 모디 총리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1991)을 수정해 2014년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2018년 미국, 일본의 FOIP 개념에 '포용적인(Inclusive)' 원칙을 추가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인도태평양(Free, Open, Inclusive Indo-Pacific, FOIIP)' 원칙을 발표하고, 2019년에는 FOIIP를 인도 버전으로 발전시킨 인도-태평양이니셔티브(Indo-Pacific Oceans' Initiative, IPOI)를 발표하였음.
- 초기에는 미국, 일본, 호주에 비해 쿼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2020년 갈완계곡(Galwan Valley) 등지에서 중국과의 국경분쟁이 빈번해지면서 쿼드 회원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2022년 들어 해양안보에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

※ 2022년 2월 멜버른에서 열린 제4차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 4개국 외교장관들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원칙 등을 통해 해양 영역에 대한 인식, 연안 자원개발 능력, 항해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한 파트너와의 연대를 강조

- 한편 비전통적 안보 부문의 협력을 강조하는 인도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2021년 두 차례의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코로나19 백신과 보건협력, 인프라, 기후변화, 신흥기술과 사이버안보 등 비전통 안보 및 번영 의제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평가됨.

❍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프랑스>는 2021년 7월 기존 3개로 나뉘어있던 전략을 집대성하여 '2021 프랑스 인도태평양 전략(2021 France's 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했음.[6)]

※ 기존에 프랑스의 인태전략은 2019년 5월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에서 프랑스와 안보(Fran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방위전략(France's defence strategy in the Indo-Pacific)[7)], 8월 외교부에서 발표한 프랑스의 "포괄적 인도태평양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French strategy in the Indo-Pacific "for an inclusive Indo-Pacific")[8)] 3개의 전략 문서로 구성

6) 유럽 각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이대우. 2021. "미국, 유럽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정세와 정책.* 2021년 9월호(통권 342호). 세종연구소.

7) https://www.defense.gouv.fr/content/download/559608/9684004/file/France's%20Defence%20Strategy%20in%20the%20Indo-Pacific%20-%202019.pdf.

8) https://www.diplomatie.gouv.fr/en/country-files/asia-and-oceania/the-indo-pacific-region-a-priori

- 동 전략서에서 프랑스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FOIP와는 다른 대안적 접근을 제시하여 다극적 세계질서 수립을 위한 전략을 선보였고,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한국과 같이 동일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요 지역 행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강조

-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토(거주 160만 명) 보유, 8,000여 명의 상비군 주둔, 배타적 경제수역(세계 2위) 약 93%가 인도양과 태평양의 프랑스 영토와 연결되어 인도양의 강국으로 인식

- 프랑스 인태전략은 해군 활동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안보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국가들에게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함.

- 프랑스는 2020년 10월 15일 크리스토프 페노(Christophe Penot)를 프랑스의 첫 인도-태평양 대사로 임명하고, 인도, 호주와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인도양 국가로서 주도적 외교를 전개

❍ <독일>은 2020년 9월 인도태평양 전략(Policy guidelines for the Indo-Pacific - Germany-Europe-Asia: shaping the 21st century together)을 발표[9)]

※ 독일은 전략이라는 표현 대신 지침(guideline)이라는 표현을 선택, 중국의 부정적 반응을 피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알려짐. 독일과 유사하게 네덜란드도 같은 해 11월에 인도태평양에 대한 지침을 발표(Indo-Pacific: Guidelines for strengthening Dutch and EU cooperation with partners in Asia)

- 상기 전략서는 독일 인태전략이 중국의 부상 보다는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경제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단극 또는 양극의 세계 질서를 거부하며, 국제협력의 목표를 법치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에 두고 있음을 밝혔음.

- 이처럼 독일 지침상에는 군사 부문 비중이 적지만 현실에서는 군사훈련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2021년 9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 상황 보고서[10)]에서도 '21.8~'22.2간 프리깃함(호위함) 바이에른(Bayern)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찰 및 훈련 임무를 수행한 성과를 강조하고 있음.

※ 독일 프리깃함은 2021년 12월 한국(부산항, 첫 방문), 2022년 1월 인도(뭄바이항) 기항하여 인도태평양 협력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연달아 개최

❍ <영국>은 별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하는 대신 2021년 3월에 '경쟁

---

ty-for-france/#:~:text=In%20an%20international%20context%20marked,the%20heart%20of%20this%20 strategy.

9) https://www.auswaertiges-amt.de/en/aussenpolitik/regionaleschwerpunkte/asien/german-government-policy-guidelines-indo-pacific/2380510

10) Progres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German Government policy guidelines on the Indo-Pacific region. https://www.auswaertiges-amt.de/blob/2481638/cd9bf25e722b94db263c94e4dc8ec87e/210910-llip-fortschrittsbericht-data.pdf.

의 시대’ 글로벌 영국의 대전략을 담은 일련의 전략서를 발표하였고, 여기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2021년 3월 2021 안보·국방·개발·외교 통합 전략(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11] 및 국방명령문서(Defence in a competitive age)[12]

- 전략서는 중국의 국력이 지속적으로 강해지면서 체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무역 및 투자 측면에서는 호의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함을 역설하였음.

- 그리고 실제로 2021년 5월 1일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HMS Queen Elizabeth)이 이끄는 항모전단(Carrier Strike Group 21)의 인도태평양 파견, 해군 주둔 병력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동 항모전단은 지중해, 중동, 인도태평양 및 남중국해를 통과하며 40여개 국가(싱가포르, 한국, 일본, 인도 등) 방문하여 70여개 활동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미국과 네덜란드도 참여하여 국제 작전의 성격을 띰.

- 미국과 가장 긴밀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는 영국은 2021년 9월 15일 호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지원하는 미-영-호 오커스(AUKUS) 출범을 공식 발표했음.

○ 2021년 9월 16일 <EU>는 인도태평양 협력전략(The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을 발표함.

- 이 전략문서에서 EU는 다자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가치 수호, 다극 체제 등 EU가 주장해 온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원칙과 접근법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할 의지를 재차 표명

- EU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중국 관리(manage)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국과의 관계 강화에 있음. 중국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포용성 측면에서 EU 입장은 아세안의 AOIP에 근접하며 미국과 차이를 보임.

- 특히 인도태평양의 경제가 팽창하면서 글로벌 경제에서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도태평양과 유럽 간 안전한 무역 수송로를 유지하는 것은 유럽 경제의 이익과도 직결됨. 역내 수요 증가로 방산 수출을 비롯한 협력 기회 확대도 중요한 동기임. 따라서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경제협력 비중이 큼.

- 유럽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큰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의 유럽 안보 보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

11) 영국 정부는 동 전략 문서를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의 외교·안보·개발정책으로 평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lobal-britain-in-a-competitive-age-the-integrated-review-of-security-defence-development-and-foreign-policy.

1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74661/CP411_-Defence_Command_Plan.pdf

-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역내 안보 위협이 증대함에도 지리적 거리가 있는 인도태평양에 군사력을 동원한 전략을 펼치는데 대한 내부 비판, 회원국간 이견, 미-중 패권 경쟁과의 차단 등의 의도로 미국 인태전략과는 다소 거리를 두었으나, 최근 중국, 러시아의 현상변경 시도가 잇따르자 안보 협력에 동조하며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함.

표1.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별 관점·목적·강조점 비교

	미국	일본	인도	아세안	유럽
문제 인식	▪ 미국의 외교·안보·경제·기술 전반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부상 ▪ 역내 분쟁 가능성	▪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중국의 부상, 미국의 관여 확대가 필요 ▪ 약화된 경제성장 동력 확보	▪ 중국의 부상과 주변국 영향력 확대에 따른 지정, 지경학적 변화 우려 ▪ 국익과 자율성 수호를 위한 외교적 수단 필요	▪ 중국의 강압적 현상변경 요구 우려 증대 ▪ 외교·안보·경제 전반에서 미국의 적극적 역할 기대하나 실망감 누적	▪ 중국을 현상변경 시도국가이자 규칙, 질서의 위반자로 간주 ▪ 그러나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질서 형성은 비동의
목적	▪ 중국의 팽창 저지 및 미국 주도 국제질서 강화 ▪ 지역내 미국의 영향력 강화, 동맹국 및 주요 파트너국 결집 (인도)	▪ 미일동맹 강화, 자체 방위력 증대 ▪ 다층적(동류국가, 스윙국가) 안보 및 경제 네트워크 강화 ▪ 안정적인 생산 및 판매시장 확보	▪ 접경 지역 및 해양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 저지 ▪ 무역 및 ICT 관련 중국 의존도 축소, 중국 대체 생산기지화 ▪ BRI 견제를 위한 소다자 협력 추진 및 미국과 보건,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협력 강화	▪ 아세안 중심성: 아시아 다자외교의 중심에 위치시키고자 함. 역내 지역 갈등 및 강대국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을 방지 ▪ 역내 경제발전을 위해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확대	▪ 국제법,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서구세계 가치 수호 ▪ 무기 판매, 군 협력 등 지역 국가의 국방 역량 강화, 균형적 성장 지원 등 협력 확대
대중국 관점	▪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반, 수정하려는 현상변경 국가 ▪ 억압적 국제질서를 확산시키고 주변국 영해 침범 국가	▪ 현상변경 국가 ▪ 경제협력과 영토-안보 문제 분리, 동중국해(센카쿠 열도), 남중국해 문제 등에 단호한 입장	▪ 인도의 지역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험(국경 변경 시도 등) ▪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전략 배타성에는 반대 ▪ 인도 경제성장 및 개도국 입장 대변에 중요한 협력국가	▪ 일대일로를 비롯하여 무역, 투자, 정치 등 아세안 국가들에 영향력 날로 증대 ▪ 남중국해,, 메콩강 유역 수자원 분쟁 유발 ▪ 하지만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전략 배타성에는 반대	▪ 중국은 체계적 경쟁자(systemic rival)이며, (신장,홍콩) 인권과 민주주의 등 가치 위배자 ▪ EU 경제안보 유지 위해 중국도 인태전략의 대상 국가에 포함
원칙/ 강조점	▪ FOIP, 법치,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 군사 및 전략적 측면 ▪ 지역 국가의 자체 능력강화, 소다자 네트워크	▪ 강력한 미일동맹과 FOIP 네트워크 통한 안보 강화 ▪ 개발협력으로 미국 인태전략을 보완하는 한편 역내 리더십 확대 도모	▪ 미국과 협력은 강화하나, 외교.안보 측면 비동맹 원칙과 전략적 자율성 유지 강조 ▪ 포용성을 강조하는 독자적인 인태전략(AEP, IPOI 등), 다양한 협의체 운영 등	▪ 국별로 중국과의 관계, 외부 협력 필요성 등에 따라 이슈별 다양한 협력 나타날 가능성	▪ FOIP, 법치,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 소다자 안보 및 경제협력 강조 ▪ 중국 배제 또는 대결에는 반대

출처: 각 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서 및 정부 발표자료에서 핵심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Ⅲ.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의제별 비교

○ 국가별 인도태평양 전략은 관점과 목표에 따라 세부 의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III장에서는 전략의 양대 축인 '번영'과 '안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주요 의제를 비교하여, 향후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제 개발에 단초를 제시해보고자 함.

1. "번영" 하는 인도태평양

○ 미국이 인태전략 의제 중에서 동맹 및 파트너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무역협정과 사이버안보, 인프라 등임.

- 이는 아세안을 비롯한 지역의 중소국가들에게 미, 중간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기보다는 실용적인 의제를 추진하여 지지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인도, 호주, 일본의 설득을 수용한 결과인 동시에,
- 미국 역시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기술 공급망, 디지털 무역협정과 같이 국익에 직결되고 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임.

※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며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2.4) 당일 美 하원에서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신규 공급망 구축에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경쟁 법안(America COMPETES Act)'이 통과[13]

- 조만간 미국의 CPTPP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 의회와 상공회의소에서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을 갱신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은 600억 달러의 공적기금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프라> 개발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2021년 9월 제2차 쿼드 정상회의에서 인프라 조정그룹 설치에 합의했는데, 이는 중국의 부채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임.

○ EU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번영, ▲그린 전환, ▲해양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연계성, ▲군사 안보, ▲인간 안보의 7개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할 것임을 밝힘

13) America Creating Opportunities for Manufacturing Pre-Eminence in Technology and Economic Strength (America COMPETES) Act https://dean.house.gov/2022/2/the-house-passes-the-america-competes-act

- EU가 인도태평양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가치는 번영으로, '가치사슬의 탄력성 복원 및 다각화'와 '규칙 기반의 통상 파트너십 강화'에 중점을 둠.

※ EU는 역내 반도체 생산 확대, 디지털 및 그린 전환을 위한 Chips Act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칩 공급망 구축을 '디지털 주권'으로 비유

※ "EU가 FTA 체결을 통해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축소하는 것이 주권(Sovereignty)을 수호하는 것이다." (Petra Sigmund 독일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표2.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별 "번영" 의제 비교

	미국	일본	인도	아세안	유럽
디지털/반도체	▪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 중국 기술 굴기 저지를 목표로 한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 미국-일본 최초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2019) ▪ 유럽과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검토 ▪ 디지털 경제 및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담론 주도 희망	▪ 디지털 인프라 및 기술 협력 강화 (베트남에 데이터처리센터, CLMV 국가에 소프트웨어센터 설립 등) ▪ 디지털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력(인도-일-프랑스 파트너십, 인도-EU R&D 파트너십 등)	▪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 2030 달성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 경제 추진 ▪ 지역 내 통합 추구 ▪ 지역통합에 따른 무역이익 증가 기대	▪ 반도체 생산 확대, 디지털 및 그린 전환을 위한 European Chips Act 발표 ▪ 디지털 연결성 및 무역규범 확립
사이버 안보	▪ 디지털 연계성 및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DCCP) 이니셔티브 ▪ 쿼드 사이버 그룹 출범	▪ 자국 및 역내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역량 구축을 촉진	▪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 모색 ▪ 인-미 사이버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 인-프 사이버 협력 등	▪ 싱가포르, 일본 등 역내외 국가들과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센터 설립 및 커리큘럼 개발 ▪ 스마트시티 시스템의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관련 강좌 개설	▪ 글로벌 공공재로서 사이버공간 관리를 위한 다자 협력 ▪ 사이버공간의 전략적 공유 영역에 대한 접근을 놓고 국가 간의 경쟁 관리
공급망	▪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IPEF 등) ▪ 가치 공유 국가들 중심 '쿼드 플러스' 구상	▪ 메가 FTA인 CPTPP와 RCEP, 일-인-호 3자 SCRI 등을 통해 일본이 주도하는 공급망 형성과 시장 확대 도모	▪ 동방정책(Act East)의 실현기재로 활용 ▪ 무역, 연결성 및 해상 운송 ▪ 일-인-호 SCRI,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서밋 등 지역협력 추진	▪ 탈중국 서구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 ▪ 인적역량 강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책 추진	▪ 역내 국가들과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체결하고, 공급망을 보다 탄력적이고 다변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증진 (7대 전략의 첫 번째 목표)
인프라/연계성	▪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실행을 위한 쿼드 인프라 조정 그룹 발족 ▪ 미국-ASEAN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 인프라거래 및 지원 네트워크(ITAN)[3]	▪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한 연결성의 강화 등에 의한 경제적 번영 추구 ▪ 인도 및 아세안을 중심으로 산업회랑,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	▪ 연계성(connectivity)는 아세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핵심 의제 (* 인프라.경제.정치.사람간 교류 등 총괄) ▪ ACMECS 개발파트너(2019년)로서 연계성 및 디지털 인프라 협력 사업 추진	▪ 아세안 연계성마스터플랜 (MPAC) 2025, IORA, BIMSTEC, BIMP-EAGA, 메콩협력 등 기존 프로그램과의 조화 및 보완 ▪ 인도양과 태평양의 통합을 위해 물리적, 제도적 및 인적 연계성 강조	▪ Global Gateway ▪ EU-India 플래그십 프로젝트 Connectivity Partnership 발족

출처: 각 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서 및 정부 발표자료에서 핵심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대중국 견제에 있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 대부분은 경제문제와 군사 및 인권, 민주주의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14)]

- 중국은 독일과 EU의 최대 무역상대국(무역규모 4,800억 유로)으로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음.
- 독일 메르켈 정부가 중국과 EU간 투자협정 타결을 주도, 2013년부터 7년간의 협상 끝에 2020년 12월에 타결에 이르렀으나, 위구르 무슬림 탄압 관련 EU 제재로 인해 2021년 5월 투자협정 비준 과정이 중단되었음.
- 이는 EU가 중국에 대해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여 실용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임.

○ 일본은 미국, EU 등과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추진)하고, 메가 FTA인 CPTPP와 RCEP, 일-인-호 3자 SCRI 등을 통해 일본이 주도하는 공급망 형성과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인도, 아세안과 같은 신흥시장에서 개발협력 자금을 활용하여 산업회랑, 스마트시티 등 대표적인 인프라 건설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인도는 일본, 프랑스, 동남아 국가들과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SCRI, 인도태평양 비스니스 서밋, New Quad로 불리는 인도-이스라엘-UAE-간의 경제협력 포럼 등 다양한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한편, EU, 아세안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중국의 일대일로와 유사한 연계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아세안은 AOIP에서 협력 분야로 ▲해양 협력, ▲연계성, ▲UN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경제 및 기타 협력을 제시했고, EU와 의제 협의를 통해 상기 분야에서 협력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음.

2. “안전한” 인도태평양

○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부분 국방부, 특히 해군에서 발표함으로써 동 정책은 기본적으로 <해양안보>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안보는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를 아우르는 개념이며, 군사 자원의 한계와 유럽 역내 환경, 국내 정치적 고려 등으로 인해 안보 이외 영역의 협력으로 점차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14) 독일 메르켈 총리가 미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21.7.15) 시 인권, 민주주의 수호와 기후변화 대처 등은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나, 그 외 대중국 견제를 위한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 문제 등은 합의 도출하지 못함.

- 프랑스를 제외하면 인도태평양에 영토를 두지 않은 유럽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관여는 중국의 시장질서 훼손 또는 역내 안보 위협을 통제하려는 의도 하에, 관리 가능한 환경, 관리가능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음.

표3.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별 “전통 및 비전통 안보” 의제 비교

	미국	일본	인도	아세안	유럽
해양 안보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 및 억지력 강화 ▪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및 해양 안보 수호	▪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 ▪ 법의 지배에 기초한 해양의 자유를 주장 ▪ 다층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안보 분야에 있어서 파트너십과 지역에 있어서 일본의 위상 강화	▪ 인도양에서 중국의 팽창 저지를 위해 파트너 국가와 공조 추구 ▪ 항해의 자유, 규범과 규칙 수호는 인도 번영의 필수조건 ▪ IPOI의 7대축 중 해양안보가 절반을 차지(해양안보, 해양생태, 해양자원, 해양운송 등)	▪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전략 추구 ▪ 역내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고 규범에 기반한 지역 구도를 뒷받침하는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환경의 촉진을 지원	▪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해양영역인식(MDA)협력 강화, Quad plus 긍정적 인식 ▪ AUKUS 협정으로 인해 영국vs프랑스 갈등
기후 변화	▪ 기후 변화 의제를 선도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 (아시아 EDGE 등) ▪ 쿼드에서 그린항만 네트워크(Green-Shipping Network),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 인태지역 도서국 및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위대 지원 강화 ▪ 특히 역내국 군대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양자협력을 통해 파리협약 목표 실천 노력(인도-미국 Green Strategic Partnership, 인도-영국 청정에너지센터 및 2030 에너지전환파트너십 등) ▪ 규칙 기반 다자협력 추구	▪ 기후변화와 재난위험 경감 및 관리에 있어 협력추구 ▪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적응 정보플랫폼(AP-PLAT)을 통해 기후 관련 데이터 제공 ▪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량 감축 예측 역량 강화 모색	▪ ‘그린 전환’은 7대 전략 두 번째 목표로, 그린동맹 및 파트너십(Green Alliances and Partnership) 체결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검토
백신	▪ 쿼드4개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백신 개발 협력 ▪ 미국 국방부(DOD)는 전반적인 국가 코로나19 대응을 지원	▪ 코로나19 원조 통해 지역리더십에 대한 의지 과시 ▪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개발에 대한 약속	▪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예방접종 증명서 인정 및 디지털 백신 관리 시스템(Co-Win Conclave) 운영을 통해 역내 위상 제고 ▪ 세계 최대 백신생산국으로서 쿼드 백신 이니셔티브에서 중심적 역할	▪ 미국으로부터 2,300만회 이상의 백신 접종과 1억 5,800만 달러 이상의 긴급 보건 및 인도적 지원 혜택 ▪ 그 외 일본(약 100만회 분), 중국으로부터 백신 제공받음.	▪ 백신 수출 ▪ 글로벌 백신 협력체인 COVAX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 세계의 백신 제조 능력을 강화를 위해 의약품 공급망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가치 (민주주의, 인권)	▪ 중국 견제를 위한 민주주의 연대, 인권과 노동 의 가치를 IPEF 등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의 기본 원칙으로 상정 ▪ 인도-태평양 투명성 이니셔티브(IPTI)를 통해 건전한 거버넌스 지원	▪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미국과 함께 보다 분명한 태도로 중국 문제에 참여 ▪ 대만 문제에서 단호한 태도 견지	▪ 미국과 민주적 가치를 공유, 중국 견제 ▪ 유럽과 민주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간 포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	▪ 법치와 민주주의 가치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나 다수 회원국의 현실과는 괴리가 큰 상황	▪ 외교 분야에서 민주주의, 법치, 인권, 국제법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의 원칙 강조 ▪ 중국 위구르 무슬림 탄압 비난

출처: 각 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서 및 정부 발표자료에서 핵심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현재 각국의 전략문서를 보면 해양안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남중국해에 대한 문제를 적시한 경우는 미국, 일본, 아세안 정도이며 매우 원론적인 언급에 그침.

○ 바이든 집권 이후 미국은 <기후변화>를 위한 다자협력의 무대에 복귀, 쿼드 정상회의에서 그린항만 네트워크,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등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지만 후속 조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다만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추진하고, 아세안과 인도는 기후변화 대응 및 신산업 발전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 2030 온실가스 감축계획(NDC) 목표 상향, 개도국 기후금융 지원, 기타 관련 기술 혁신 협력 등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추진체 설립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국 모두 국내 관심사 후순위로 당분간 관망 필요

○ <백신>은 인도를 쿼드의 핵심 멤버로 흡수한 대표 의제로서, 미·일·인·호 4국은 쿼드 백신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총 12억 회분 이상을 공급할 예정

○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이미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 개최, 2021년 5~6월에 걸친 동남아 3개국(인니, 캄보디아, 태국) 방문 시 셔먼 부장관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한데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은 2021년 12월 최초의 부패근절전략(the United States Strategy on Countering Corruption)을 발표하고 인태전략의 첫 번째 목표인 FOIP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에 기반한 대외정책을 지속 강조하고 있음.

- 하지만 주요 협력국인 인도에서 민주주의 후퇴, 미국의 의지 및 역량에서 동 의제는 미국에서는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고, 오히려 EU 차원에서 위구르 무슬림 처우 등 중국의 인권 문제에 지속 관여할 가능성이 높음.

Ⅳ.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평가 및 전망

○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안보·경제·가치의 제반 측면에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미국이 리드하는 국제질서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안보를 담당하는 협의체로 출발한 쿼드의 군사동맹 수준은 미국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임. 이는 미국과 달리 일본, 호주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는 동의하지만 직접적인 대립에는 유보적인 입장이 인도 역시 비동맹 노선을 견지하며 중국과 가능한 범위 내 협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임.

○ 이같은 회원국간의 입장 차이에 더하여 포용적인 인태지역을 선호하는 아세안, EU의 존재는 쿼드 뿐만 아니라 인태전략 자체가 '번영' 의제의 비중이 높은 실용적인 협의체로 확대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우주·사이버 등 군사 영역, 공급망·디지털·인프라·보건·기후변화 등 경제 영역,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의 전 영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새로운 협력의 규칙을 주도하는 두 가지 기조가 강화될 것이지만,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실천 가능한 의제부터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에 대해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제시하면서 유도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의 유인은 미국 국내의 핵심 이익, 그리고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국가들의 핵심 관심사의 교집합에서 선정할 가능성이 큼.

-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동맹 및 파트너국가들과 접근을 조율하는 것을 미국 국내 역량의 기초 강화, 중국과의 대결(competing) 등과 함께 중요한 추진 전략으로 거론

○ 한편 2022년 프랑스가 EU 의장국을 수임함에 따라 EU 차원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보다 높은 강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EU 의장국인 프랑스는 2월 22일 한국을 포함한 56개 국가를 초청하여 EU의 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 하에서 △ 안보 및 국방, △ 디지털 및 연계성, △ 보건,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과 같은 글로벌 이슈의 3가지 의제별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특히 국제무역 규범 준수와 경제 협력 확대 등 경제 이슈에 논의가 집중되는 한편 이를 위해 해상항로의 안전한 통행 보장의 중요성도 강조될 것으로 알려짐. 그 외 EU와 한국·일본·싱가포르 간 디지털협정 체결의 타당성 검토도 이루어질 전망임.
- 한편 4월 프랑스 총선(마크롱), EU 내부 입장의 다양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직면한 위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안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여건은 당분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국들이 추구하는 각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번영'을 위시한 실용적인 의제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의 협력은 번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안보를 병행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제한 없는(no-limits)" 전략적 파트너십을 표명하는 등 서방세계에 맞선 중-러의 결집과 세력 과시는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building bridges between the Indo-Pacific and the Euro-Atlantic)하려는 미국의 인태전략에도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임.

○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신냉전 구도 형성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당분간은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를 보다 활발히 전개할 것이고 주변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면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아세안 및 일부 유럽 국가 중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서방의 제재를 피한 중국의 후원 등을 기대하는 국가들이 나올 수 있음.

※ 2022년 2월 싱가포르 싱크탱크인 ISEAS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동남아 오피니언 리더들은 중국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정치적(54.4%), 경제적(76.7%)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중국을 꼽았음.

○ 특히 아세안과 일부 친중 국가들(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중국 영향권 아래 포섭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EU, 인도, 호주 등 주요국들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아세안을 지원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협력의 원칙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2.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조에 대한 제언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향후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대외전략을 수립하여 미국을 위시하여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새로이 형성되는 지역질서 수립에 가담하고 협력 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 즉, 다른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결성을 높임으로써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중요한 것은 한국은 미국 또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여타 국가들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과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협력이 용이한 형태의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임.
-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의 관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협력국은 한국과 일본이며, 이는 유럽과 이해관계와 가치를 공유하며(규칙 기반의 무역 체제 유지 등) 이를 추구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미국도 전략서의 제목과 목차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임을 밝히면서 여타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을 확대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한국의 차기 정부도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022년 5월 출범할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정권 논리로 재단하지 않아야 하고, 신남방정책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원칙과 사업들,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약속한 분야는 반드시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문재인 정부가 미 바이든 행정부와 인도태평양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을 약속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승하여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해야 할 것임.
- 미국과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에서의 협력을 약속했으며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한 공동 설명자료(Working together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New Southern policy and the Indo Pacific strategy)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접근 방식 조율을 위한 한미정부의 포부를 밝힘.
-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및 우호국의 GDP는 전세계 GDP의 60% 정도로 평가되고 있고 미래 성장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미국 중심의 경제블록화가 진행될 경우 한국은 이에 반드시 동참하여 국익을 증진시켜야 할 것임.
- 다만 EU, 인도의 인태전략을 참고하여 한미동맹은 강화하되 압도적인 경제력 및 군사력 2위 국가인 중국과는 의제별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전략적 입장을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 국익에 부합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 인태전략의 원칙을 수립 및 대내외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국과의 협력에 유연한 입장인 유럽, 인도 등과 교감을 넓히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3. 국가-의제별 매트릭스형 협력 전략 수립

○ 차기 정부가 수립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제별로 가장 효과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의제별 매트릭스형 협력을 염두에 두고 수립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개하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전략상의 수렴, 보완, 대립(convergences, complementarities, confrontations)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음.
- 이때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데 대한 국내외 여론의 피로도 누적을 타개하고 중국에 대한 효율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자의 인태전략의 우선순위 중에서 수렴 및 보완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제는 발표 후 추진 일정 및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이 많으나, 이하에서는 비교적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추진 당사국의 의지가 분명한 몇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 여건을 평가해보고자 함.

가. 디지털 협력

○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의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디지털> 협력이 될 것임.

- 디지털 무역협정은 미국 인도태평양 협력을 통해 지역의 최대 현안을 해결하고 실질적 혜택(Tangible benefits)을 체감할 수 있는 의제로 미국, EU 등 주요국 추진 의지가 매우 높음.
- 美 웬디 커틀러(Wendy Cutler)는 2021년 4월 CPTPP, RCEP을 능가하는 미국 주도 디지털 무역 협정을 제안했고,[15] 상하원 의원 및 산업계 수요도 확인되었음.
- 역내 미-일, 싱가포르-호주,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 무역 협정 등이 체결되었고, 한국, 베트남도 최근 협상에 합류하면서 디지털 무역 규범은 역내에서 가장 분명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임.
- EU는 디지털(technology)과 기후변화를 쿼드와 협력 가능한 분야로 지목하고

15) Wendy Cutler and Joshua P. Meltzer. 2021. “Digital trade deal ripe for the Indo-Pacific.” *The Hill.* April 5, 2021.

Global Gateway라고 명명한 인프라 프로젝트 내에서 디지털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 싱가포르 등 핵심 파트너 국가와 디지털연구협정 체결도 검토할 예정임.

- 또한 디지털 거버넌스 측면에서 EU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과 디지털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디지털 기준 보편화, 디지털 부품 공급망 강화, 사이버안보 증진 등을 위한 양자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함.

○ 한국은 디지털 규범에서 앞서가는 인도태평양 선진국 그룹에 속하는 동시에 RCEP에서 인도, 아세안과 디지털 협정 조율,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상정해볼 수 있음.

-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가능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바, 이는 아세안은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소화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발달된 디지털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한국과 아세안은 기초적인 수준에서라도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 유엔 총회의 디지털 거버넌스와 사이버안보 위원회에 공통의 관심사를 반영한 설명서를 제출하거나 아세안+3 등의 협의체를 이용해 지역적 수준에서 디지털 규범 설정에 기여할 수도 있음.

- 한편 중국은 사이버안보(cyber sovereignty)라는 명목 아래 국내 통신망을 규제하고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어, 아세안 전체를 포함하는 디지털 협정 또는 RCEP 내에서 디지털 협정의 발전은 어려울 것임.

나. 공급망과 신통상질서

○ 다음은 주요 소재 및 산업(반도체)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공급망>의 구축으로, 2022년 상반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16)]

- 미국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양자-지역-다자 차원의 장을 연계하여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곧 국가안보로 동일시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2021년 11월 EAS에서 발표한 IPEF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됨.

- IPEF는 CPTPP나 RCEP와 같은 다자무역협력협정과는 달리 디지털·녹색 전환 관련 신통상 및 경제안보 의제를 선택적으로 다루는 협의체로서, 미국의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 계획인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

16) 바이든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내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무역 정책 목표는 아니라고 발언했음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2021. “President Biden’s 2021 Trade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to Congress.” March 2021).

- 세부적으로 디지털 경제, 무역원활화, 공급망, 지속가능성, 노동자의 권리, 인프라 등 6가지 분야에서 합의 기반 협력을 도출하는 '모듈형'으로 추진될 전망됨.

- IPEF가 미국과 EU가 신흥기술의 관리나 국제적인 통상과제로의 협력을 목적으로 2021년 가을에 시작한 무역기술위원회(TTC)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TTC에서는 기술표준과 기후·클린 기술, 안전한 공급망 등 10개 분야에서 작업반을 통해 논의를 진행 중임.

- 인도 역시 쿼드작업반을 통해 Robotics, 5G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등 신흥 핵심 기술 분야의 공급망 참여를 기대

- 한국은 미국과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의약품 등 핵심 부품소재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 증진과 공동 연구 강화에 합의했으며, 최근 반도체 공급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EU에서도 반도체 공급망 핵심 파트너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음.

  ※ EU의 디지털 주권 수호를 목표로 하는 'EU Chips Act' 발효(2022.2.8.)를 앞둔 2021년 10월 1일 반도체 칩과 디지털 분야 협력을 위해 EU Commissioner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음.

○ 한국은 미국, EU 등 선진국과 공급망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향후 핵심 소재 및 산업(반도체)의 공급망 구축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율하는 한편, 아세안, 인도 등 중국 대체 생산기지로 변모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임.

- 신남방지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미중의 지경학적 경쟁으로 공급망의 파편화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임.

- 특히 이 지역에 중국 대체 공급망 구축, 인프라 추진이 우선 과제임을 고려할 때, 한국은 신남방지역 경제발전 단계 및 분야별로 필요한 지식·경험·제도·인프라·기기 등 전방위 협력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는 GVC 구축, 산업회랑·스마트시티 등 산업인프라 및 도시 건설을 위한 산관학 협동 추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의 인도태평양 공급망 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청와대 직속 범부처 통합 조정기구가 필요함.

- 한국은 중간재 무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공급망이 가장 밀접하게 엮여있는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도 대응해야 하므로, 미국 또는 중국 어느 한 진영을 대상으로 준비하는 것은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음.

- 공급망 논리가 촉발된 것은 기술경쟁력, 원자재 확보 및 국제 분업 등 다차원적인 문제가 집결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공급망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최선의 국내 자원 투입 및 국제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것임.

- 공급망을 특정 원자재나 품목을 '관리' 하는 차원에 국한하여 특정 부처 산하의 TF로 운영해서는 수급상의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임.

다. 기타 의제: 인프라와 안보

○ <연계성> 프로젝트는 미국, 유럽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제3국 진출 형태를 적극 검토

- 연계성을 위시한 인프라 협력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초창기부터 한국 신남방정책과 접점을 모색한 대표적인 분야이나,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의 한계가 분명한데다가 한국과의 협의채널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었음.
- 한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도 유럽보다 앞서 있는바, 유럽 기업들은 걸프 지역과 라틴아메리카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기업들과 공동 진출 형태로 협력을 희망함.

○ 또한 한국도 <안보>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음.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한국의 핵심 안보 사안이기도 하므로 한국은 인도태평양의 해양, 디지털·사이버 등 안보 증진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현재 신남방정책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지역전략은 안보에 있어서는 전통과 비전통 모두 취약하나, 지역전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보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한국 국익에 부합하는 관여 전략에 대한 근본적, 총체적, 다각적 고민이 필요함.

※ 한국은 대외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고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상교통로를 이용하고 있음.

- 프랑스와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해양 안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유럽이 역량을 보유한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이 분야에서 한국은 유럽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해양 안보는 기후변화, 환경, 불법 어업, 생물 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협력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한국은 해양부 동남아 국가와의 소다자 협력을 위해 2021년 BIMP-EAGA 협력을 위한 제1차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바, blue economy와 해양안보를 협력 의제로 포함하여 지역 국가와 호혜적인 안보 협력 추진도 검토해볼만함.
- 디지털안보의 측면에서 한국은 현재 네덜란드가 진행하는 사이버안보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EU로 확대해볼 필요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EU와 현지 경찰 및 군의 역량강화를 실시한 경험으로 동남아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임.
- 또한 유럽의 안보 네트워크는 방위산업 협력 확대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방산 수출, 인적교류 등에도 관심이 필요

4. 협력 국가와의 관계 증진과 협력 기제의 심화

○ 미국은 지역 구도에서 동남아시아가 중심에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혹은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유럽, 일본, 인도, 아세안은 기존의 협력 기제, 특히 아세안을 모태로 하는 협의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으고 있음.

○ 미국 주도의 협력 기제를 신설하게 되면 '멤버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볼 때, 다수의 국가들이 지지하는 '아세안 중심성'을 고려한 아세안 플러스 형태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은 모두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며,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Plus, ADMM-Plus)와 같이 아세안에 기반한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아세안과 전략적 연대를 형성해왔음.
- 미국(웬디 R.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EU(스테파노 산니노 유럽대외협력청 사무총장)는 2021년 12월 3일 첫 미국-EU 인도-태평양 고위급 회담에서 법치, 민주주의 등 공동의 가치에 기초하여 지역의 안정, 안보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 협력 의사를 확인했음. 여기서 양측은 아세안 중심성의 중요성과 강력하고 독립적인 아세안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하였음.
- 인도는 IPOI를 2019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발표, 아세안 AOIP의 4개 분야를 인도-아세안 협력 분야로 삼는 동시에 별도의 제도적 기제 없이 아세안확대해양포럼(Expanded ASEAN Maritime Forum)을 포함하여 아세안이 주도하는 기존 협력의 틀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음.
- 유럽과 한국의 협력도 아세안의 맥락에서 점검될 필요가 있는데, 아세안은 유럽에게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이기 때문임.

※ 아세안과 EU는 2022년 벨기에에서 대화상대국 45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 계기 양자간 인도태평양 협력을 공고히할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음.

※ 인도는 2020.2.6.~7에 제4차 EAS해양안보협력회의 개최(호주,인니와 공동)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세안 중심성을 강화하여 '아세안과 협력국'이 형성하는 인도태평양 질서 수립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 한국은 신남방정책의 3P의 균형을 맞추고 보다 적극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회담과 협력을 제도화하고 강화하고, 아세안의 협력 기제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함께 미중 경쟁을 넘어서 대안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비전, 질서를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미국이 2022년 상반기에 발표할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국가의 참여 여부가 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바, 이는 아세안 중심성에 또다른 도전이 될 것임.

○ 한편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시급한 과제임.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협력에서 일본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일본이 지역 주요 행위자와 체결하는 협의체에서 멤버십과 의제를 선정하는데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CPTPP, SCRI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미 전략서의 10대 행동계획에 한-미-일 3국 협력을 포함시켜고 한-일 관계 증진을 강조한 점에서 미국 인태전략에서 삼각축의 중요성을 환기. 미일 동맹은 미중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미 동맹, 미일 동맹, 그리고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일본, 그리고 호주와의 동맹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정책의 부족을 시정해야 할 것임.

※ "We will also encourage our allies and partners to strengthen their ties with one another, particularly Japan and the ROK."(The White House 2022: p. 9)

※ 일본은 하야시 외무상 연설(2022년 1월 17일)에서 일-미 동맹, 인태전략, 중국과의 분쟁에 대한 대응 다음으로 한국,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적시했음. 하지만 민간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합의를 한국이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

○ 마지막으로 공급망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협력 전반을 논의하고 이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과 역량을 갖춘 상위 조직 구성이 시급함.

- 현재 외교부는 아세안국, 아시아태평양국 등으로 구분되어 인도태평양 협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원자재 관리를 위한 공급망 TF 운영도 외교부와 산업부가 독자 행보를 보이는 등 부처간 협력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끝.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jong.org 문 의: public@sejong.org
『세종정책브리프』에 개제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